

<자유기업원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 자유주의와 함께 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 일시: 2022년 4월 8일 (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자유기업원

- 기조연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자유기업원**



[기조연설 1]

## 시대정신과 지식인의 역할

---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시대정신과 지식인의 역할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 현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현재 세계는 실용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음.
- 세계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불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이전하고 있음.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관계로 이동하면서 과거의 3차에 걸친 산업혁명과 다른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임.
- 보수주의의 방향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정부의 역할 및 정부와의 윈윈하는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예) A. Kaletsky (2010) Capitalism 2.0
- 경제성장-사회-환경의 상호 갈등관계에서 윈윈하는 관계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
  - 에너지전환 및 탄소감축을 통한 Net Zero 2050 달성과 지속가능발전
-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이익극대화에서 이해관계자를 공통으로 고려
  -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한국도 이러한 탈이념의 시대에 직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소득이 선진국에 진입하였지만, 국민들의 행복은 경제발전 단계에 부응하지 못함. (2020년 149개국 중 62위, WHI)
  - 저출산·고령화,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높은 청년실업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에너지전환과 좌초산업 문제, 디지털 전환과 양극화 해소 문제 등 장단기적 과제를 해소하면서 국민행복(happiness)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2.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주의

-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해오고 있음.
-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과거 제1차와 제2차 산업혁명 시기의 발전을 거친 이후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맞이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함.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가 수정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로 전환.
  - 그 이후 극단적인 체제논쟁에 빠져들었고 이는 곧 자유방임이라는 차원에서의 정부의 역할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고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상식적인 법치주의(rule of law)에 근거한 역할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World Justice Project(2021)에 의하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는 2020년 기준 20위로 1인당 GDP 순위 즉, 경제발전단계와 유사하게 나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법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다고 봄. 즉, 일반 민간수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법치가 수용되고 있지만 소위 상류층 혹은 정치권에서는 법치의 원칙이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음.

Factor	순위
Rule of law	20
Constraints on Government Powers	25
Absence of corruption	33
Open government	21
Fundamental rights	23

	순위
Order and security	27
Regulatory enforcement	21
Civil justice	13
Criminal justice	19

주: 139개국 대상, 138,000가구, 4,200 기관 및 전문가 조사

자료: <https://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global/2021/>

### - Rule of law ranking (192개국 대상)

Factor	순위
Rule of law	28
Government effectiveness	22
control of corruption	46
Regulatory quality	36
Voice and accountability	50
Political stability	66

	순위
Corruption perceptions: Transparency international	33
Political rights (역계산 한 순위)	56
Civil liberties (역계산 한 순위)	47
Competitiveness	14
Cost of starting a business	61
Shadow economy(역계산 한 순위)	42

주: political rights, civil liberties, shadow economy는 약한 순위 순서로 되어 있어 역계산 한 것임.

자료: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wb\\_ruleoflaw/](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wb_ruleoflaw/)

### 3. 씽크탱크의 중요성과 지식인의 역할

- 탈이념이라는 시대적 전환에 의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씽크탱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2020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에 의하면 전세계 Think Tank의 11,175개 중에서 한국이 412개로 세계 5위를 점하고 있음. 미국(2,203), 중국(1,413), 인디아(612), 영국(515) 다음으로 많은 think tank를 가지고 있음. 문제는 질적인 차원으로 100위안에 드는 연구소는 KDI(5위), KIEP(30), IFANS(외교안보 연구소, 59), 자유기업원(93위)임.
- 한국의 Think Tank의 문제점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고 민간연구소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자원문제도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됨. 예를 들어 민간기업연구소들의 경제성장률 예측과 같은 판단에 많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위축되고 있음.
- 너무 많은 국책연구소 비중은 정부지원에 의한 자문보고서가 국책연구소로 집중이 되고 이는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민간연구소의 발달에 저해되는 효과로 나타남.
- 한국도 국책연구소 중심의 자문기관은 이제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됨. 과거 개발 초기 시대에 민간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 외국원조나 정부재원에 의하여 다양한 국책연구소가 설립됨. 현재는 이러한 시기가 지났고 민간재원이 풍부하고, 학문의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기에 민간연구소의 발전이 필요함. 이를 통해 객관적인 연구와 정책 제언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한 정책제언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지식인은 민간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대정신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시각에서 경제이론을 왜곡하거나 과장한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인의 자세가 아님.
-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장이 대표적인 것임. ILO의 임금소득주도성장 논리를 가져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둔갑시킨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득(노동소득+ 자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경제학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논리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임.



[기조연설 2]

## 제20대 대선의 의미와 과제

---

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 제20대 대선의 의미와 과제

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서 작년에 3번, 금년에 1번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권교체의 열망은 정권연장의 열망보다 최소 23.2%에서 최대 28.2% 높았다.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정치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는 주사파 정권이 추진한 저항도 혁명의 실패를 의미하며, 넓게 보면 87체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87체제는 신민주주의 세력(proletarian revolution group)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이들은 동유럽 및 구소련이 몰락하자 목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사회진반에 진지구축에 나섰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숙주삼아 음지에서 힘을 불려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던 집권기간 내내 절대 권력을 구축하며 저항도 혁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사파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락하여 혁명은 실패했고 민심이반은 극에 달했다.

주사파 정치세력은 정치는 못해도 선동은 잘했으며 선거에 귀재였다. 제20대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 등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정치구도에서도 선전했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의 여론조사자료로 본다면, 8월에 대선후보 이재명이 윤석열을 11.6%차로 앞서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역전 당했다. 그러나 1월에 들어와 다시 역전하여 4.1% 앞섰다가 3월 9일의 대선결과 0.73% 차로 패배하였다. 승자인 윤석열은 “이겼어도 이긴 것이 아니라 지지 않았을 뿐이고,” 이재명은 “졌어도 진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했을 뿐”인 셈이 되었다.

제20대 대선 결과 진영사회가 완성되었다. 세력분포를 대선결과로 비정한다면, 자유우파는 윤석열 48.56%+ 허경영 0.83%= 49.39%이고, 평등좌파는 이재명 47.83%+ 심상정 2.37%= 50.10%이다. 시민사회가 양대 진영으로 양분되었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평등좌파진영이 자유우파진영보다 커진 것이다. 권력구도로 보면, 자유우파는 대통령(행정부)과 상식의 힘을 장악했을 뿐으로, 국회, 언론, 노동, 교육 등을 장악한 평등좌파의 권력기반이 더 크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사회주도세력이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영사회가 완성된 만큼 반정부 포퓰리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벌써 평등좌파에서

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눈을 떠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갈 데까지 가봅시다”라는 혁명적 선동이 나타나고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졌잘싸는 이재명을 지키려는 명분이 되어, 민주당은 벌써 이재명 세력으로 개편되고 있다. 박홍근이 민주당의 원내총무로 선출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반정부 포퓰리즘은 머잖아 내전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계로 line-up 되면, 범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정치보복으로 둔갑되어 수많은 시위인파를 끌어들일 것이다. 시대정신은 자유우파가 장악했지만 저항정신은 평등좌파의 전유물이다. 더욱이 좌파우세의 정치지형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므로 정치지형과 정치권력 사이의 불일치는 정치대립을 극도로 격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체제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진영사회의 정치과제는 모든 분야의 정상성 회복이다. 무너진 국가체제를 상식과 공정의 시대정신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 체제변혁은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민주세력은 근육을 키워서 정치적폐를 법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정치의 흐름을 타고 신냉정시대의 친해양 중심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통합정치”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과연 내전상황에서 정치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기조연설 3]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과제

---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과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기업원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여를 기대한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계몽 사업을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경제교육과 정책홍보 그리고 기업가적 도전정신의 확산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보수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율성의 확대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의 존중이 출발점이다. 그래야 자발적 혁신이 가능하다. 기업가적 모험의 확산이 가능하다. 제한된 정부와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의 철폐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 관용의 정신이다. 자율성의 확대는 다양성의 사회와 함께 한다.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에선 자율성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뛰어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협업의 정치 개혁이다. 정치개혁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권력의 협업’은 지금 당장 급한 것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구분된다. 정치개혁은 중장기 과제다.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시대정신 실현은 여야 공감과 합의의 시간표와 정교한 제도설계 능력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개헌의 입구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합의가 있어야 논의의 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어떤 선거제도를 쓸 건지가 향후 정치개혁의 앞날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고민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가 될 것이다.

중장기계획으로서의 정치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라이프트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수결 민주주의다. ‘단일정당의 정부구성, 행정부 우위, 승자독식의 다수결 선거제도, 양당제, 단원제 그리고 권력의 중앙집중’등의 제도적 특성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수결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다수결 민주주의”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독점의 정치’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현실형으로 독점의 정치는 ‘최악형’이다. 배제의 정치로 정치적 포용은 물론 사회경제적 갈등의 정치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점과 배제의 정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다. “동물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로 바뀌었을 뿐 국회는 공동체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못하며 관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강력한 정당기울과 당론이 상징하는 정당 집단주의는 중오와 저주의 재생산 역할로 전락하여 결국 무책임한 정당이 되고 말았다.

독점과 배제의 정치 그리고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의 반대편에는 ‘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가 있다. 정치개혁의 최종목표는 ‘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 거버넌스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따라서 독점과 배제의 정치 그리고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 나아가 정당 집단주의와 무책임 정당제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두 가지 원인이 중요하다. 하나는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운용 관행과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승자독식의 다수결 선거제도이다.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독점과 배제의 정치를 상징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극복. 둘째, 국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 셋째, 총리와 내각의 기능 정상화. 넷째,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섯째, 국회와 정당개혁 등이다.

첫째, 대통령 권력의 제왕적 성격과 제도를 축소하고 개선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핵심이다. 2018년 개헌실패는 여야모두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의 탈피에 합의하면서도 어떻게 얼마나 벗어날지를 두고 엇갈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의 국민적 요구를 전제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 권력의 축소조정은 국회와 총리 그리고 내각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의 국회이전 등이 대표적이고, 직선 대통령과 의회 다수와 총리의 조합이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총리지명에서부터 국회의 총리선출까지 다양하다. 그 안에는 국회 과반의석 다수당의 총리 지명권, 국회 정파별 총리추천과 대통령 지명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협의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떻게 진전시켜 제도화할지 실행계획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여야 리더십의 정치력이 중요한 대목이다.

대통령 권력의 축소조정과 국회 권한의 강화 그리고 총리와 내각의 기능 정상화는 개헌으로 최종 완성된다. 선거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되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단계별 시간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더십이 결정적인 대목이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동시에 대통령 선거에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가 관건인데 지금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 권력의 제왕적 성격과 제도 개선과 비례성 강화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과 국회개혁으로 이어진다. 정당과 국회개혁의 목표는 능력과 책임의 국회 그리고 정책과 인재풀의 정당을 지향한다.

다섯째, 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 거버넌스는 공공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거버넌스로 정치개혁 리더십이 전제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기업가적 모험의 정치개혁 리더십이 정치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